

■ 靑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보고회’ 살펴보니

균형개발 의지 확인...재원조달 여전히 의문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보고회’에서는 무안~해남을 잇는 서남권에서 그동안 추진돼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부의 통합추진 방침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개발 사업부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방향이 제시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꼽힌다.

반면, 종합발전구상에 열거된 대부분의 인프라 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업들을 재거론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크게 실망스럽다는 게 중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무안·목포·신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발전 구상’과 해남·영암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은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서남권 발전구상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른 J프로젝트나 무안기업도시 조성 사업은 모두 낙후된 서남권의 경쟁력을 높여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또 청와대가 최초 계획한 ‘서남해안 발전구상’과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따로따로 추진됐을 경우 예상되는 비효율과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이 낙후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속내가 남아있지만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 3천만 평에서 추진되고 있는 J프로젝트가 사업부지를 아직 확보

2020년까지 22조 투입, 무안·목포·신안 신산업 거점 육성

인프라 계획 종전 ‘짜깁기’ 불과-대선 앞둔 ‘민심용’ 지적도

하지 못해 진척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일단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 발전방안’은 작년 행담도 사건으로 무산된 S프로젝트의 기초를 되살린 구상이다. 정부는 이곳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맞는 친환경에너지, 자연생태·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조선·식품·세라믹 등 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 낙후된 이

곳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포함된 인프라 부분은 이미 각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을 토대로 하고 있는 데다 민간투자 유치 방안, 예산계획, 사업구상이 빠져있어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밝힌 15조원의 인프라 설치는 이미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부, 지자체 등이 수행해온 사업을 종합한 것이다. 15조원 가운데 10조 5천억원이 올해 정부가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사업인

점만 봐도 그렇다. 각종 발전사업에 투입될 비용 7조 2천억원에서 재정투입분은 10% 안팎이다. 나머지는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작년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기업도시마저 대기업들이 선포 나서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일각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남발로 전국의 땅값을 들쭉이게 한 참여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또하나의 현실성 없는 개발계획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에 의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어떠한 투기방지책이 빠져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남권 종합 발전구상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 설

서남권 개발 실제적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목표·무안·신안 등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은 ‘장밋빛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되면 서남권은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서남권이 신산업의 허브로 부상해 지역산업 및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관광·산업·물류분야의 특화된 거점을 구축, 새만금·광주·제주 등과 연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4만명 수준인 이 지역의 인구는 57만명으로 늘어나고 제조업 생산이 25배, 제조업 고용이 9.5배, 서비스업 고용이 2.3배 증가한다.

여기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대상인 해남·영암과 무안기업도시 사업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서남권개발 관련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도 문제다. 인프라 비용 15조원을 제외한 사업비 7조2천억원 가운데 재정투입분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6조원 이상을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범도시로 이미 선정된 기업도시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사업의 조기 개발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과 투자재원 확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불법·폭력시위 엄단’ 이번엔 엄포 안돼야

정부가 24일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중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까지 천명했다.

지난 22일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 및 위협이 우려수위에 달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폭력시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 담화문만도 지난 2월 공무원 노조 및 철도노조 분규 사태, 5월 광복사태, 7월 한미 FTA 및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분사 점거 사태에 이어 이번까지 울려 여섯 번째다. 이처럼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말로는 엄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미온적이거나 관용적 대응

으로 일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큰 몫을 했다고 본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까지 천명했거나 시위대를 일방적으로 ‘폭도’로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 해도 쇄파이프와 각목이 난무하고 심지어 공공 시설물에 방화하는 것과 같은 폭력시위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선풍한 다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폭력시위에 대한 담화문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위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발표가 엄포로 끝나지 않겠다는 말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8만 3천원 지급

우리·민주·민노 ‘연금 개혁안’ 합의

2008년부터 노인들에게 월 8만원이 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2008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6개월 뒤인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액 평균소득의 5%(올해 기준 월 8만3천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을 해당 연령층에 포

함되는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60%에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3당이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들 3당은 한나라당과 집중 철출을 벌인 뒤 오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연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한나라당이 기존의 기초연금 제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타협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盧, KBS 사장 정연주씨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연주(60) 전 KBS 사장을 KBS 사장에 임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이 정 사장에게 대한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 이사회의는 지난 9월 정 전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는 정연주 KBS 사장의 제임명을 반대하는 범국민 저항운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靑 안보실장 백종천씨 내정

사정비서관에는 이영렬씨



송민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후임에 백종천(사진) 세종연구소 소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인사추천위를 열어 외교안보리안 후속인사 사항을 점검한 뒤 내주 초 인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종천 소장은 목포고교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방전문가다. 청와대는 또 검찰 복귀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이재순 사정비서관의 후임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내달 중순께 통합신당 ‘원탁회의’ 출범

北 핵실험...‘햇볕 정책’ 강약 조절해야

고건 前총리 기자간담회

고건 전 국무총리는 24일 향후 정계 개편 구상과 관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중·하순께 어떤 형태로든 신당 추진을 위한 대화기구인 ‘원탁회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자문그룹인 ‘광주·전남지역 미래와 경제’창립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몇몇 분들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원탁회의의 준비상황과 참여 인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대권출마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고 전 총리는 “민주당이 제3지대에서 통합신당을 창당하자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신당은 모두에게 문호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일궈낸 역사적 지도자”라며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은행’ 설립자 현준호씨 아들...현정은 현대 회장 부친

현영원 前 현대상선 회장 별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부친인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이 24일 새벽 80세를 일기로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타계했다.

고인은 지난 50여년간 한국을 해운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해운업계의 거목이다.

20세기 초 호남 최대 갑부로 불리던 현기봉 선생의 장손자로 태어났으며 부친인 현준호씨는 호남은행을 설립한 은행가였다. 한국전쟁 당시 부친이 습자 장남인 현 전회장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1950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5년간 도쿄지점 외국부에 근무했다.

현 전 회장은 1964년 신한해운을 창업해 독자적으로 해운업체를 경영했다. 신한해운은 1984년 현대상선에 합병될 때까지 중견 해운업체로 이름을 날렸고,



현 전 회장은 신용장 업무에 밝아 국제적 분쟁해결사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은 1960년 당시 자금사정이 어렵던 현대건설에 철근을 독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정주영 명예회장과 인연을 맺었으며, 현 전 회장의 딸 현정은씨와 정 명예회장의 아들 정몽헌씨의 결혼까지 성사하게 됐다. 현 전 회장은 1984년부터 현대상선 경영에 참여,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95년까지 회장직에 있으면서 현대상선을 세계적인 해운업체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금고 광주은행 선정

광주시는 24일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주은행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난 9월 공포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공개모집에 응모한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경쟁을 벌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광주는

행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를 맡기고, 차점을 받은 국민은행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수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은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시와 금고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시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 16개 기금으로 2조 4천억원이고, 일일 평균 자금보유액은 4천억원 정도이다. /김주정기자 jnews@

제이유 ‘선물 리스트’ 태풍 오나

로비의혹 수사 정·관계 확대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의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최근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제이유그룹의 선물대상자 명단을 확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이유그룹 사무실에서 입수한 ‘선물대상자’리스트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10여명이 아니라 수십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며 경찰간부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유 관계자들은 이 리스트가 의례적인 기 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그러나 검찰은 이 리스트가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작성됐으며, 해마다 등장하는 고정인물이 있다고 밝혀 이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리스트에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7명, 현직의원 1명, 전직의원 1명, 법조계 인사 다수, 사회단체 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로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예측 불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한 정승호 총경 외 또 다른 총경 D모씨와 제이유그룹과 1000만원 가량의 돈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돈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퇴임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